

## ‘되’로 기부하고 ‘말’로 특혜받는 부영주택

부영골프장 잔여지 용도변경 기부채납지 ‘한전공대 부지 포함’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 “기부와 용도변경 별개” 주장 뒤집어  
기부 의미 퇴색 ... “원칙·상식에 맞게 토지 개발이익 환수해야”

한국에너지공단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부영골프장 잔여지에 대해 토지 용도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나주시가 부영주택이 기부한 대학 부지를 기부채납(공공기여)에 포함시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지역 발전을 위한 순수한 의미의 기부가 자칫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한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지 기부와 아파트 건설을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체육시설을 고충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 때 따른 수익구조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혁신도시 주민 전체를 위한 공원 조성, 공공시설이나 장학재단 설립 등 적절한 수준의 공공기여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르면 4월 중 ‘부영CC 공동주택 건설사업 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의 골자는 현재 녹지지역으로 된 빛가람동 908번지 부영골프장 잔여지 35만2294㎡(10만6500평·사업 대상지)의 토지 용도를 평균 24층(최고 28층) 높이의 아파트 5328가구 건립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부영주택 측은 해당 사업의

기간을 2020~2026년으로 제시했으며, 아파트 평균 면적은 81~110㎡ 규모로 모두 분양 형태로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부영주택 측은 2016년 5월 전남 개발공사로부터 450억원을 주고 75만㎡를 매입해 골프장으로 운영하다가 전체의 53.3%에 해당하는 40만㎡를 지난해 6월 대학 부지로 학교법인 한국에너지공대에 기부했다.  
부영주택 측은 용도 변경과 공동주택 건축 과정에서 사업지의 12.8%에 해당하는 4만5367㎡(1만3700평)를 기부채납하겠다고 나주시에 제안했다. 시설별 기부채납 면적은 학교용지 1만5000㎡, 도로 1만2537.9㎡, 완충녹지 1만7830㎡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기부채납하겠다는 시설이 모두 이번 아파트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시설들로, 혁신도시 내 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없어 공공기여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나주시는 향후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

서 논의될 공공기여와 관련 1년 전 부영주택 측이 기부한 대학부지를 포함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 관계자는 “강인규 시장이 국회 출석 전 공공기여분 확대를 위해 경기도 부천 등 일부 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도시계획 사전협상제’를 준용해 적정 공공기여분(공공기여율)에 대한 내부 의견을 모았다”며 “이 과정에서 사업지 내 학교·도로 부지 외에도 자연스럽게 부영 측이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한 토지를 공공기여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처럼 기부한 부지를 공공기여로 간주하는 ‘편법’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부영CC 잔여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기부채납지 목록에 이미 무상기부한 한전공대 부지를 재차 포함하는

것은 절대 안 되며, 이는 원칙의 문제”라며 “부영주택이 대학부지 기부로 브랜드 이미지는 개선한 뒤 잔여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다시 인정해주는 것은 상식과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시장은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나가 “특정 기업이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부지를 기증했다는 말이 나와서 되겠느냐”는 위원들 지적에 “직을 걸고 막겠다. 도시계획 심의 과정 등에서 공공기여분을 시인 눈높이에 맞게 확충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도 같은 자리에서 “조건부로 기부가 이뤄졌다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기부 조건은 없다, 순수하게 대학 발전과 지역 사회 인재 양성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말한 바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학원 종사자들 코로나 확진 광주 봉선동 학원가 ‘초비상’

전국 신규확진 5일째 500명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5일째 일일 신규 확진자 수 500명대를 유지하는 등 4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 대확산을 막는데 집중하고 있다. 광주에선 학원 밀집지역에서 학원 종사자 2명과 한 교회의 교인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일상 공간 내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6면>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543명 늘어 누적 10만 5279명을 기록했다. 방역당국은 주말 검사건수가 평일 대비 대폭 감소했음에도 전국적으로 5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광주·전남에서도 각각 4명, 1명 등 5명이 추가 발생하는 등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확진된 광주 2219번은 지난달 25~26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전북 전주 수정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가 다니는 광주 북구의 한 교회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교인 15명 등 22명을 검사하고 20명은 자가 격리했으며, 이날부터 17일까지 교회를 폐쇄하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

다. 광주에선 또 지난 2일 확진판정을 받은 2명이 남구 소재 학원 종사자로 확인돼 접촉자 77명(자가격리 18명, 능동감시 2명)을 검사하고 있다. 다행히 6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13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자는 한 달 넘게 300~400명대를 오르내리며 정체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최근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500명대로 올라선 상황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382명→447명→506명→551명→557명→543명→543명을 기록했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1~3일(637명→532명→521명)에 이어 나흘째 500명대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각 146명, 인천 19명 등 수도권이 311명으로, 전체 지역발생의 60.5%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부산 60명, 대전 28명, 전북 23명, 대구 15명, 충북 14명, 경북·경남 각 13명, 울산 11명, 충남 10명, 강원 6명, 광주 4명, 세종 3명, 제주 2명, 전남 1명 등 총 203명(39.5%)이다.  
광주·전남에선 최근 유흥주점별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도 상무지구 유흥업소별 집단감염 사태를 겪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에서 커피 매출이 가장 많은 곳은? ▶14면
- 광주비엔날레 첫 주말 관람객 표정 ▶16면
- KIA, 브룩스 호투에도 병실에 날아간 승리 ▶18면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학원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4일 오후 봉선동 학원가를 찾은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정세균 총리 “일촉즉발 상황 확산세 안 꺾이면 더 강한 방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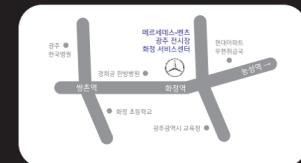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올라선 뒤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좀 더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검토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위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도 같은 각오로 이번 한 주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국민들도 더는 안전한 곳이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 많은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또는 운영제한 강화 조치를 다시 검토하고 나섰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난 1년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현재의 상황은 ‘대유행’이 본격화되기 직전과 유사한 점이 많다”며 “지금 우리는 4차 유행이 시작될지 모르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유행이 다시 확산하면 짧은 시간 내에 하루 1000명 이상으로 유행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 1차장은 이어 “정부는 감염 사례가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하고, 이런 위반이 다수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집합금지를 실시하거나 운영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1차장은 구체적으로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체육시설, 교회 등을 거론하면서 “이들은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로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는 자율적 노력을 믿고 (앞서) 방역조치를 완화했으나 최근 발생한 다수의 집단감염 사례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증명함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Mercedes-AMG GLC & GLC Coupé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Mercedes-AMG를 직접 경험 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Mercedes-AMG GLC 43 4MATIC (배기량 2,996cc, 공차중량 1,955kg, 지동9단, 복합연비 8.3km/ℓ, 도심연비 7.5km/ℓ, 고속도연비 9.6km/ℓ, 5단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212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의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운행 연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기 저항계수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